

행안부 차관보 부활... 지방시대 힘 실는다

행안부,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추진... '1국 2과 5명' 감축 이태원·오송참사 반면교사, 재난조직 재탄생 수준 개편

2013년 사라졌던 행정안전부 차관보(1급) 직위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10·29 이태원 압사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분야 조직은 재탄생 수준으로 개편된다. 단, 감축 없이 현행 규모는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계획이다. 이는 이상민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이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업무 복귀한 시점으로는 23일 만이다. 차관실 산하 행정 분야 조직 가운데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지방자치행정발전실이 차관보로 승격 신설된다. 행안부 차관보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 3월 폐지된 후 1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실 산하의 국장급 4개 관(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균형발전지원관·지역기반정책관) 중 지역기반정책관을 없애고 3개 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으로 재편한다. 지방시대와 함께 국정과제의 또 다른 축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디지털정부국은

지방정부실로 확대 개편한다. 실 밑에는 정부혁신조직실 산하에 있던 공공데이터정책관을 흡수해 3개 국(디지털정책국·공공데이터국·공공서비스국)을 두게 된다. 반면 기존의 정부혁신조직실은 '혁신조직국'으로 격하돼 정부개혁과 조직관리만을 담당한다. 국민참여과와 지역공동체과 2개 과도 폐지된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하 재난안전관리 분야 조직은 감축 없이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단, 기존 '3개 실 1개 국(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재난협력실·비상대비정책국)'을 실제 재난업무 프로세스인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춰 완

전한 탈바꿈을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의를 분류되는 재난 용어를 담아 '3개 실 2개 국(안전예방정책실·자연재난실·사회재난실·재원복구지원국·비상대비정책국)'으로 개편하게 된다. 특히 재난복구지원국은 별도 국으로 독립시키고 기존의 수습지원과에 더해 수습관리과를 신설해 재난 수습 역량을 강화한다. 이로써 현행 '1차관 1본부 7실 29국·관 117과'에서 '1차관 1본부 1차관보 6실 28국·센터·관 115과'로 변경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행안부는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도 조속히 실시해 지방시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안전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규제혁신 통한 사회적약자·주민 편의 증진

전북도, 행안부 주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5건 선정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탈시설 장애인 주택보증금 경감' 등 4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그간 적극행정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과 도민과 기업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처분지연, 불필요한 절차,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기업·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제이나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인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 힘써왔다. 그 결과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탈시설 장애인 주택보증금 경감(전주시) △빈집 해체계획서 검토 및 날인비용 감면(진안군) △한전전주, 통신주 등 지방물 이설 부가차세 과납금 환수(정읍시) △지적재조사지구 내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임실군) △사경농민 농지 취득세, 신청없이 감면(임실군)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더불어 각종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점이 돋보였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약 7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完비한 임대주택 27호를 확보하고, 기존 세대당 약천민원이었던 보증금을 75% 인

하하며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했다. 진안군은 건물 해체신고 시 건축사의 날인 및 검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발생하는 약 50만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건축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정비의 경우 100%, 주거용건물의 경우 50% 날인 및 검토비용을 감면하여 관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부담을 경감했다. 이외에도 임실군은 토지분할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현실경계를 적용하며 인허가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경농민이 농지 취득 시 별도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면하는 등 타 지자체의 규제개선 모범 사례를 적극 도입하며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를 나타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규제개선 사례 발굴 외에도 시·군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향후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조례 및 내부규정 등을 수시로 발굴·개선하며 기업과 도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힘쓸 예정이다. /김재훈기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협업 다짐

전북도·국조실,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실무 워크숍 개최

전북도와 국무조정실이 17일과 18일 이틀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전라북도-국무조정실 실무 워크숍'을 열고 있다. 워크숍에는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을 비롯 특별법 제도개선 핵심과제 100여건의 소관 부서장, 국무조정실 전북지원과 실무진,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가 한데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날 13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후속조치로 전북도와 국무조정실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8월 중 국회 발의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처 수용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논의된 주요 제도개선과제는 △자치권 확보(농생명, 환경, 인력, 금융) △생명산업 육성(생명산업, 전환산업) 등 분야별 중점 과제 100여건으로, 도 소관 부서에서 제도개선 과제 설명과 부처 반응,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설명한 뒤 국조실 질의답변, 전문가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본질이 반영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사전 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 수용을 최대화 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을 통한 부처 협의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어지는 도전의 기회를 잘 살



전북도와 국무조정실이 17일과 18일 이틀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전라북도-국무조정실 실무 워크숍'을 열고 있다.

려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기자

호남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동 목표 협력

전북도, 원광대-순천대·원광대-군산대 상호 협력체계 마련

호남권 내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인재 육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전북도는 원광대학교를 주축으로 '원광대-순천대' 및 '원광대-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각각 16일과 17일에 맺었다고 밝혔다. 원광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원광대 복경수 교수, 순천대 심준보 교수, 군산대 정동원 교수 등 각 학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장과 사업단 구성원들이 참여하였다. 원광대와 순천대, 군산대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및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이라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협약에는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수혜자의 취·창업에 관한 다양한 현장 실무교육 등 공동 수행,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소통 활동 및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가적으로 원광대와 순천대는 △소프트웨어 가치확산 공동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원광대와 군산대는 △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을 위한 장비·시설 등의 공동 활용을 협약했다. 원광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은 이번 두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농생명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등 지역 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소양을 지닌 전문·융합 인재 양성에 한 발짝 나아갔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는 원광대와 군산대에 인재 양성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각 대학의 산학·학술 연구 및 도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원광대는 2018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이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됐으며, 사업 4년차에 수행된 단계평가에서 그 우수함을 인정받아 최장 6년에 걸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순천대와 군산대는 올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신규로 선정되어 지난날에 협약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두 학교는 앞으로 4년간 국비 70여 원, 추후 단계평가를 통해 최장 8년간 국비 최대 150여 원을 지원받아 차세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나선다. /김재훈기자

전북새일센터 취업자 고용유지율 77%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은 2022년도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여성 4,039명 중 상용직 취업자 2,388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3년 7월 기준 고용유지율이 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용분야 취업자 고용유지율 조사는

고, 다음으로는 사회, 복지 분야가 20.8%(497명), 제조 분야 15.3%(366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재취업 후 중도 퇴직자 545명을 분석한 결과 이직 및 직장 부재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고용유지 현황 외에도 퇴직 및 이직 사유, 직장생활 고충 토로, 경력개발 교육 정보 등 1:1 유선 및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조사 결과 보건의료 분야가 전체 27.1%(647명)로 가장 많았

다. 취업자 사후관리 일환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고용유지 현황 외에도 퇴직 및 이직 사유, 직장생활 고충 토로, 경력개발 교육 정보 등 1:1 유선 및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조사 결과 보건의료 분야가 전체 27.1%(647명)로 가장 많았

2023년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군산대 2학기 원광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긴장해소·표현력·웃음코칭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최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현대인의 인기과목에 맞설지 마시고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옥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론과 면접(교양과목) 담당교수 역임
- 한국스피치·유변협회 전북회장
- 전주매일신문사 부사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스피치·시낭송 지도자
- 저서 "365 스피치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김제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웃음코칭(주)	익산, 논산, 김제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야), 스피치지도사(수)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상담전화: 285-6676, 010-7304-5665(주,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해 9월에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